

“포괄대금지급보증제도 전체 공공공사로 확대를”

건정연 ‘건설공사대금 지급보증 일원화 방안’보고서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중 실제 적용대상은 ‘0’건

2013년 09월 30일 (월)

이시봉 ✉ sblee27@kosca.or.kr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하도급대금관련 지급보증제도를 하나의 포괄대금지급보증제도로 통합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원장 노재화)의 이보라 책임연구원은 최근 ‘건설공사대금 지급보증 일원화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포괄대금지급보증대상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보라 책임연구원은 현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제도는 교부율이 저조하고,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 보증은 보증대상 범위가 과다하므로 포괄대금지급보증제도로 통합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연구원은 포괄대금지급보증제도는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중 현재까지 실제 적용대상 공사건수가 1건도 없는 실정이라며 포괄대금지급보증제도 적용대상을 전체 공공공사로 확대하고 보증서 발급에 드는 비용을 고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포괄대금지급보증제도의 면제 대상인 회사채 평가 ‘A’ 이상인 업체도 포괄대금지급보증서 발급을 의무화 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도급금액 20%의 일괄적인 보증 기준이 아닌 공사기간 및 기성주기에 따른 보증범위를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시봉 기자